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경희 70년의 민주주의는 교훈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나

개교 70주년 특집 기획팀 khunews@khu.ac.kr

#. 1949년 개교한 경희대학교가 어느덧 고희(古稀)를 맞는다. 한자 풀이 그대로 일흔 살까지 산다는 것은 옛날에는 드문 일이었다지만 요즘처럼 수명이 길어진 사회에서 고희연은 더 이상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70년 전 학교 문을 열고, 한국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 서울 회기동에 터를 잡은 경희대가 70년 이상 지속되며 대한민국 명문사학으로 자리 잡게 될 줄은 당시에는 몰랐을 것이다. 70년을 이어온 영광은 따로 축하해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처럼, 우리가 그동안 민주화를 잘 이뤄왔는지를 판단해보고자 한다. 적어도 1987년 이후 우리나라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으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이 보편적인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았고 생활원리의 하나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주권재민으로서의 민주주의 개념에서는 아래로부터의 요구, 즉 민중들의 요구는 항상 정당하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다만 '민중들의 요구'에도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뒤따른다. 기득권 집단과의 대화나 대화를 위한 노력이 충분할 만큼 진행되었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요구사항이 근거 없이 무시되고 있는가, 이 같은 상황이 시민사회 전체에 충분히 전달되었는가, 민중들로부터 대화보다는 응집된 힘을 보여주자는 자발적인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가. 적어도 이러한 전제들이 수반될 때에만, 민중의 집단적 행동은 최소한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역사를 떳떳이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과연 경희가 지닌 학원, 사상, 생활의 민주화가 학내 구성원과 떳떳하게 마주할 수 있는지 짚어보려 한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이제는 옛말이 되어버린 '학교의 주인은 학생'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양 캠퍼스에는 교원 1,442명, 직원 446명, 학부생 26,063명이 존재한다. 교원과 직원 수를 합쳐도 학생 수에 한참 모자라다. 학생은 꾸준히 본인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고 실제로 그랬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약해진 학생 민주주의와 과편화된 학생사회의 모습은 과연 학생이 학교의 진정한 주인인지를 의심케 한다.

과거 강력했던 학생 목소리는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의 등장으로 대표된다. 우리학교 등록금 책정 과정은 다른 대학과 달리 논의구조가 등책위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로 이원화돼 있다. 우리학교는 1989년 '사립대 등록금완전자율화' 이후 등책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대학본부와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논의 기구인 등책위는 오늘날 모든 대학에 존재하는 등심위와는 달리 법적기구가 아니다.

등책위가 우리학교에 등장한 1989년으로 시계를 되돌려보자. 당시 3월 6일 대학본부는 신학기 등록금을 7% 인상한다고 밝혔다. 당시 총학생회(총학)는 심하게 반발하며 '대학자치협의회(대자협)' 구성을 통한 민주적 학사 행정을 요구했다. 총학이 요구한 대자협은 교수, 직원,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하나의 협의체였다. 등록금 동결 운동으로 불붙은 대자협 건설 요구는 결실을 맺었고 학생이 학교 행정에 참여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당시 7% 인상된 등록금은 학생의 목소리로 인해 인상폭을 다소 낮춰 5% 인상으로 합의됐다. 학생대표와 기획관리실이 합의한 결과다. 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예산편성위원회 학생대표 우윤식 학생은 "예산안에 대한 전면 공개와 비교육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삭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하며 합의에 참석했다.

1989년에 일궈낸 등록금 인상폭 축소는 학생의 목소리에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자협으로 시작된 학생의 참여는 이후 등책위라는 우리학교만의 민주적인 기구로 자리 잡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 민주주의는 많이 약화된 모습이다.

과거에는 전체학생총회라는, 모든 학생이 참여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자리가 있었다. 학생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전체학생총회는 서울캠 재학생 1/7 이상, 국제캠 재학생의 1/10 이상 참석을 성사 요건으로 했다. 반값등록금 요구 등으로 대학가가 뜨거웠던 2011년에는 '바꾸자 경희를, 즐기자 민주주의를'이라는 구호 아래 양 캠퍼스 모두 전체학생총회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 학생 누구에게나 열려있던 전체학생총회는 서서히 사라져갔고 2013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총회성사를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은 총학에게는 위협요소가 됐고, 자연스럽게 '의결'이라는 과정에 일반 학생이 참여할 기회도, 관심도 낮아졌다.

결국 학내에는 구성원이 직접 정치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는 사라지고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투표권'만 남게 됐다.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참정권 행사 기회인 총학 선거조차 날로 위태로워지고 있다. 선거에서 선출된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양 캠퍼스 26,000여 학생의 목소리를 대표한다. 학생자치부터 대학본부와의 협의, 최근 총장 선출제까지 학생을 대표해야 하는 사안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숱한 사안에서 자신들을 대변할 대표자를 뽑는 총학 선거는 학내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함은 자명하다. 하지만 오늘날 그 기본적인 권리 행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칙에 따라 총학 선거 개표는 총 투표율이 50%를 넘었을 때만 가능하다. 과거에는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불가능했던 적이 없었다. 1989년 있었던 서울캠 총학 선거에서는 무려 6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투표율 미달로 총학 투표 기간이 하루, 이틀씩 연장되는 경우가 숱하다. 지난 2018년 서울캠 'KHU:NNECT' 선거운동본부(선본)가 참여한 선거를 들 수 있다. 또한 2017년 서울캠 '열;알' 선본이 참여한 선거에서도 최종 투표율 50.62%로 간신히 개표가 가능했다.

최근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교수의회는 학생 대표단 투표 비율을 대폭 낮추고 교수 투표 비율을 대폭 상승시켰다. 학생 대표단 측은 교수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어쩌면 예전보다 작아진 학생의 목소리와 기본적인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필요도 있다. 단지 돈을 지불하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가지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1989년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뭉쳤던 학생의 모습을 기억하고 다시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사실을 학내에 각인시켜주기 바란다.

위계는 허물고 차이는 뛰어 넘어 성찰과 실천의 가운데서 시민으로 만납시다

대학의 본령은 학문이지만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단순히 학문 연구에만 그치지는 않는다. 대학은 사회를 구성할 시민의 양성소라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 '시민은 대학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하향세라 해도 2018년 기준으로 69%에 육박하는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여전히 OECD 최고를 기록하는 수치고, 여전히 한국인이 대학을 개인의 선택보다는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통과의례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기도 하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시점과 대학에 들어온 시점이 맞물린다는 점에서 시민 양성소로서 대학의 기능은 중요하다. 표를 던지는 기준, 나아가 사회에 대한 인식의 틀이 정립되는 곳이 대학일 확률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우리대학의 교훈을 되새긴다면 민주시민 양성은 우리 학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만 보면 우리 학교는 시민 양성이라는 과제에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출범 이래 '시민교육' 교과는 전교생이 필수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었다. 학생들이 기후변화와 생태환경 문제, 빈곤, 불평등, 민주주의 위기 등을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시민적 자질을 양성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시민교육을 한다는 것과 학생이 시민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학이 단지 교육기관이었다면 시민 양성을 위해 대학이 할 수 있는 일도 여기까지겠지만 대학은 하나의 작은 사회이기도 하다. 시민적 가치를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고 체득하는 장으로 기능할 때 시민 양성소로서 대학이 온전히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낮은 투표율로 대표되는 학생자치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투표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는 점에서 낮은 학내정치 참여도는 시민 양성의 위기 역시 보여준다. 그러나 단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대학의 시민 양성이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는 없다. 시민적 자질이 투표율이라는 숫자만으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점을 생각할 때, 순서를 따진다면 낮은 투표율은 흔들리는 민주적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이다.

1987년 혁명 결과 형식적으로나마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흔적까지 같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는 일상적 태도와 인식의 비민주성을 청산하는 것이었다. 대학의 민주화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화의 결과 총학생회(총학)를 시작으로 많은 학생 자치기구들이 생겨났지만 그것만으로 학생들이 시민으로 거듭날 준비가 완료됐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당장 학과나 동아리 선후배 관계부터 사웃 달라졌다. '군기'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2018학년도 새내기배움터부터 총학은 학생대표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김효영(일본어학 2011) 회장은 "대학생 단체 활동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안전과 성범죄, 불합리한 술 문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새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역시 예전과 달라졌다. 과거엔 강의실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교수는 가르치고 학생은 따르는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관계였다면 지금은 차츰 교수와 학생은 역할이 다를 뿐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수평적으로 토론하고 관계 맺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학기 후마 개편안이 시행되자 일군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개편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그 결과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 문제와 개편 내용의 적절성 등 여러 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학생과 교수가 동등한 토론자로 참여하는 공개토론회가 성사되기도 했다. 공개토론회는 새롭게 변화한 교수와 학생 관계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보여준다.

과제는 남아있다. 학내에 만연한 외국인 유학생 혐오 풍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국제캠 총여학생회 폐지는 젠더 이슈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이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포용능력 부족을 암시하는 징후 또한 포착되고 있다. 장애인과 성소수자 인권은 쉽게 가시화되기도 힘든 현실이다. 현재 총학은 학변, 국적, 성별과 장애로 인한 학내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자치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체로서 연대하는 시민적 자질을 길러내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고민과 모색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본다.

개교 70주년 특집 기획팀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이서림 기자 sllee1001@khu.ac.kr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구성원 공동의 지향점…양보와 존중만이 해결책

개교 기념식과 대동제를 앞둔 5월이지만 교내 분위기가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지난 3일 열린 법인 이사회는 총장 선출제와 관련해 오는 20일까지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을 늘리겠다는 논의 결과를 도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선출규정안(규정안)'을 둘러싼 구성원 대립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총장 선출제 논의가 처음 시작된 이후 각 구성원 단체가 서로의 지분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 총장 선출제 논의를 시작하던 구성원들의 '초심'은 무엇이었는가를 떠올려 보았다.

구성원 의견의 민주적 반영 우리대학 교훈의 실현

총장 선출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4년이었다. 그해 2월 '완선이사 파견 우려'로 법인 이사회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걱정하던 당시 구성원들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을 민주적으로 반영하자'는 목표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우리대학의 교훈과도 관련이 깊었다. 창학 정신과 교훈을 바탕으로 지난 70년 간 구성원 모두는 제도와 정책의 주체로 바로 서기를 희망해왔다. 총장 선출제 논의는 곧 구성원의 손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시험대와도 같았다.

구성원들은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일념으로 2014년 11월부터 대평의 산하에 총장 선출제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6년에 이르러 특별위원회는 총장 선출제 모델을 마련했으며, 이는 지난해 말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가 합의했던 안의 모태가 된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제를 다듬고 법인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다. 구성원과 법인 간 입장 차가 명확하게 갈리기도 했다. 입장 차 속에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도 논의는 꿋꿋하게 이어졌다.

대평의에 소속되지 않았던 일부 구성원 단체가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문제를 지적하자, 총장 선출제 논의는 또다시 결렬되기도 했다. 하지만 구성원들은 앞서 문제를 지적했던 일부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논의체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를 조직했다.

범대위는 대평의가 마련했던 총장 선출제 모델을 바탕으로 전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11월 법인 이사회에서는 이 모델을 일부 수용한 총장 선출제를 의결했고, 지난 3월 이를 바탕으로 총장후보추천규정(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세부 논의 과정에서 생긴 대평의 규정안 논란

하지만 지난해 구성원과 법인은 큰 틀에서의 총장 선출제에 대해서만 합의했고, 총장 선출제 입안에 필요한 모든 세부 사항까지 논의하여 결정을 마쳤던 것은 아니었다. 올해 3월, 법인이 제시한 규정 초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논란은 이런 맥락에서 발생했다. 여기에 대평의 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며 지금의 혼란에 이른다.

지난 3일 법인 이사회는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늘리기로 했지만, '대평의 규정안 논란'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론을박은 여전히 한창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쪽의 입장이 무조건 맞고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대평의 규정안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정치다. 각 구성원이 자신의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합리적인 근거로 서로를 설득하고 양보해 절충안을 마련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지난해 총장 선출제 논의 과정에선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구성원 간 논의나 합의의 테이블 자체가 무너졌다.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대평의 규정안이 나온 이후 서로를 향해 일방적으로 쏘아대는 입장만 내놓을 뿐, 한 자리에 앉아 민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라진 것이다.

구성원 간 진통 있더라도 초심은 놓지 말아야

한때 모두가 품었던 민주적 총장 선출이라는 원대한 포부 속에 진통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지 말아야 할 일념은 총장 선출제 논의가 지향하는 지점이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라는 교훈의 실현에 있다는 것이다. 만일 구성원들이 첫 마음가짐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총장 선출제 논의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할 것이다.

교훈을 다시 돌아보면 지금 구성원들이 놓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바른 절차와 과정, 그리하여 탄생할 '누군가의 총장'이 아닌, '구성원의 총장'을 바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를 함께 한 이들

40여 년간 학교에 근무하며 학교와 역사를 같이 한 이들이 있다. 바로 청소노동자이다. 학생, 교직원들과 함께 학교에서 오랜 시간 고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서 과거와 지금, 달라진 인간관계와 근무 환경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무관리처 총무팀 소속 장은석 직원은 78년에 입사해 30여 년간 교내 미화를 담당했다. 장 직원은 "노동조합(노조)의 출범 이후 복지 및 대우가 크게 나아졌다"며 "기본적인 권리를 위한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노조 출범 전에는 수당이나 근무환경 등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장 직원은 "24시간 근무도 잦았지만 하루 43,000원의 봉급에서 시작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일은 지금보다 고되었다. 현재는 자회사가 들어와 개개인이 담당하는 미화의 범위가 비교적 줄어들었다. 난방이 없던 시절엔 야간 조 노동자들은 엄청난 수의 연탄을 나르는 육체노동을 하기도 했다.

힘든 업무와 대우에도 불구하고 장 직원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었던 것은 당시 학생들과의 추억이다. 학생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80년대에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학생들과는 아주 가깝게 지냈지만 요즘에는 개인주의 때문인지 친하게 지낼 기회가 거의 없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청소노동자 A씨와 B씨는 처우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렇지만 학생,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과는 과거보다 친밀감이 높아졌다. 78년도에 입사한 A씨는 "학생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의바르지만 간혹 버릇없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87년도에 입사한 B씨는 "과거엔 교수나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가 존재했다"며 "요즘에는 총무처장께서 편하게 이야기를 걸어주셔서 좋다"고 말했다.

근무 환경이나 대우는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다고 해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남아있다. 서울캠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끝내고 2017년부터 자회사를 설립해 청소노동자를 직고용 해왔다. 학교 산학협력단은 기술을 출자하는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지주회사는 수익 창출과 사업성을 띤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청소노동자들의 안정을 위해 자회사라는 새로운 고용형태를 도입했지만, 청소노동자들이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셈이다. 또한 국제캠퍼스(국제캠) 노동자들은 여전히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된 상태다. 2017년에는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압박을 받는 등 이슈가 되기도 했다.

자회사 '케이에코텍'에 속한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의 강도가 높은 것에 비해 복지 공간이 부족하며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캠 중앙도서관에선 노동자 3명이서 6개 열람실과 외곽, 로비, 현관 등의 범위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시험기간마다 24시간 근무를 네 번 한다. 익명을 요구한 C씨는 "경비직원을 포함해 총 9명이 함께 사용하기는 휴게공간 또한 불편하다"며 "13시간 동안 근무하면 땀이 많이 나는데 샤워실도 없다"고 고충을 이야기했다.

임금과 근로시간에 관해서도 입을 열었다. D씨는 "과거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고 자회사와 계약을 시작할 때 근로시간을 유지하기로 약속을 받았다"며 "그렇지만 보수가 가장 센 야간 시간을 일방적으로 조정해 임금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케이에코텍' 측은 "근무시간 단축은 노조와 협의된 사항이며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서울캠 총무관리처 총무팀 이희포 과장은 "학교는 청소노동자 인사권과 통제에 관한 권한이 없고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대가 변하며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과의 관계, 근로 환경은 차차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왔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용역업체로부터 폭언을 듣고, 노조에 가입하면 압박을 받고, 노동량에 비해 복지가 미비하다. 과거에만 벌어질 것 같은 일들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처우가 개선됐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기는 아직 이르다. C씨는 "10여 년간 청소노동자로 근무한 우리를 학생에 비유하자면 대학원을 졸업한 셈이다"며 "돈을 받고 하는 일이지만 학교에 봉사하는 만큼만이라도 대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빛내는 이들에게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